



82일만에 구제역 초소 철수 광주시 방역 관계자들이 10일 오후 광주 남구 원산동에 설치했던 구제역 방역 초소의 장비들을 치량에 싣고 있다. 광주시와 각 구청은 초소 설치 82일만인 이날 시내 12개 구제역 방역초소를 모두 철수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과학벨트 공동유치 협력

광주시-전남도 행정협의회 합의 내용과 전망

광주 軍공항 이전은 장기화 될 듯

민선 5기 출범과 함께 강운대 광주시장이 광주공항 국내선 존치 및 국제선 재취항 공약을 내놓으면서 촉발된 광주·전남의 대립양상이 양 시·도지사의 '양보'에 화해무드로 접어들었다.

다소 논란은 예상되지만 박준영 전남지사의 광주공항 당분간 존치 동의에 강 시장이 '국제선 재취항 포기' 및 '무안공항 활성화 공동노력'으로 화답했다.

이에 따라 추후될 양 시·도의 현안 사업에 대한 협력 및 지원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광주·전남광역행정협의회를 매년 봄·가을 2차례씩 정례화하기로 했고, 실무진 협의는 수시로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난해 말 호남광역경제발전위원회 3차 회의에서 설전을 벌인 뒤 다시는 안 만날 것 같았던 두 단체장은 10일 회의 후 가진 점심식사 자리에서 맥주로 건배하는 등 화기에애한 분위기에서 정치·경제·건강 등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합의안 무얼 담았나=강 시장과 박 지사는 340만 시·도민의 행복을 위해 상생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고 공동현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강 시장이 주장한 국제과 학비즈니스벨트 본원을 광주에 두고 충청, 영남에 캠퍼스를 설치하는 삼각 벨트 방안을 실현하는 데 함께 노력하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박 지사는 "R&D특구 유치 때도 광주 유치가 협력했으며, 이는 광주의 연구개발능력이 강화되면 전남도도 그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고, 강 시장은 "함께 과학계, 정치권을 만나 설득하면 한다"고 덧붙였다.

무안공항이 서남권 거점국제공항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호남고속철도 무안국제공항 경유'를 정부에 공동건의하고 무안국제공항의 조기 활성화에 광주시가 적극 협력하는 것도 포함됐다.

아울러 '영산강 수질개선 및 자연생태계 복원을 위한 국비지원비율 상향조정·광주천 수질개선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 '2012 세계한상대회 공동 유치'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나후된 지역발전전을 위해 필수적인 광주·전남공동산업단지 조성, 경전선 복선전철화, 광주~화순·나주 간 광역철도 개설 등 기반시설 설치는 물론 광주시

의 '2011년 도시환경협약 광주정상회의', '2011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전남도의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2012 여수세계박람회' 등 양 시·도가 개최예정인 국제행사에 대한 상호협력과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군 공항 이전 장기화될 듯=이날 기자회견에서 군공항 이전 문제를 묻는 질문에 박 지사는 "국방부가 결정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국방부와 공군이 광주 군 공항 이전지가 무안공항이 최적지라는 연구 결과에 따라 양 시·도가 합의하면 이전을 추진한다는 입장지만 이날 두 단체장의 합의로 군 공항 이전 문제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광주전투비행장 이전 추진대책위원회 국강현 위원장은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주민의 의사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항 문제를 합의한 것은 잘못된 처사"라고 비난했다.

광주공항 국내선 이전을 요청해 왔던 서남권 시민단체와 전남지역 경제계에서도 이번 광주공항 국내선 존치 합의에 반발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광주공항 국내선 이전을 포기한 것은 아니고 광주·전남의 상생을 위해 대승적으로 당분간 존치하는 데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김진수기자 dok2000@kwangju.co.kr

국회 사법개혁특위 여야 간사 주성영·김동철 의원 일문일답

주 "개혁안 실현 법원·검찰 저항 장애" 김 "특별수사청 인사·예산 완전 독립"

사법개혁특위 여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은 10일 "법원과 검찰의 저항이 대단하다"면서 "그런 저항은 사법개혁위에서 내달 11일까지의 조문화 작업과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 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대법관은 6명 증원하기로 결정했지만 일단 이명박 정부에서는 증원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2~3년의 여유가 있어 대법원 상고심 사건의 추이를 고려해 대법관 증원은 안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사법개혁위 여야 간사와의 문답.

-특별수사청 구성은.
▲(김동철) 지금까지 합의한 것은 인사와 예산을 독립시키기로 한 것이다. 제2의 검찰청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벽을 치려고 한다. 검찰 출신이 곧바로 특수청에 올 수도 없고 특수청 검사도 바로 검찰로 갈 수 없게 그 기간은 3~5년 정도로 하려 한다. 책임자가 누가 되든 별도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주성영) '그랜저 검사' 수사 때 특임검사가 있었다. 그때는 비상설이었지만 이견 상설이다. 판사와 검사, 검찰수사관의 직무 관련 범죄와 관련 사건의 무고 등을 수사한다. 무고와 위증 사건을 함께 한다는 취지다. 사법개혁위 설치돼서 1년6개월 가고 있다. 이것이 현실화 안 되면 의원들 사표야 한다.



주성영의원 김동철의원

-원내 지도부와 상의했다.
▲(주성영) 충분한 상의 안 했다. -지도부와 생각이 다르면.
▲(주성영) 특위 안을 중심으로 갈 거다. 여론수렴 기간을 거치고 이것보다 더 좋은 안이 나오면 더해서 4월에 입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초동에서 반발이 거셀 텐데.
▲(주성영) 그럴 것이다. 국민참여재판과 재정신청 등의 내용에 관한 것이라면 구조의 문제다. 검찰은 법원 밑으로 들어가고 판사는 40~45세에 임관해서 대법관은 70세, 일반법관은 67세까지 한다. 보수는 국제 수준으로 준다.

▲(김동철) 전관예우 근절은 전관 자체를 안 받는 것이다. 평생토록 법원에서 검찰에서 근무하라는 것이다. 돈 벌려고 중간에 사표 내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사법개혁의 장애가 있다면.
▲(주성영) 기득권을 갖고 있는 법원·검찰 세력의 저항이라고 본다. -의견 수렴했다고 했는데.
▲(주성영) 합리적인 대안이 있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합의사항

검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판사·검사 직무관련 범죄 등을 수사하는 특별수사청 설치 ② 불기소 처분 사건에 대한 재수사 의결하는 검찰시민위원회 설치 ③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④ 경찰의 수사개시권 명문화 및 검찰청법에 규정된 복종의무 삭제 ⑤ 압수수색제도, 대상의 범위와 기간 규제하는 방향으로 개선 ⑥ 피의사실공표죄 적용 대상에 변호사 포함 ⑦ 재정신청 대상에 피의사실공표죄 고발사건 포함 ⑧ 검찰총장추천위원회 자문기관 법제화 ⑨ 기소검사 실명제 도입 ⑩ 6개월 이상 장기간 출국금지시 영장주의 도입
법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법조 10년 경력자로 법관 임명시 정년연장 ② 대법관을 6명에서 20명으로 증원 ③ 대법관추천위원회 자문기관 법제화 ④ 양형기준법 제정해 양형위원회 설치(양형기준은 국회 동의) ⑤ 판결문과 법원작성 증거목록 공개 ⑥ 조건부 석방제도와 함께 영장청고제도 도입
변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습기간 6개월 ② 판·검사의 변호사 개업시 근무기관 사건 수임 1년간 금지 ③ 법무법인 설립요건 완화(최고 구성원 3명~5명) ④ 장관급 변호인 변호사 개업 제한 권고규정 신설

만 특위에서 수용하겠다.

-대법원 운영은 어떻게 되나.
▲(주성영) 국민은 3심제를 원한다. 그래서 고법 상고부를 허용할 수 없다. 지금 대법원 1부가 4명이다. 이제 대법원 전원합의체 1, 2부로 하고 20명의 전원합의체는 1년에 몇 건 안 되도록 하는 것이다. 대법원을 6부로 만들어 1부씩은 상고이유 유무를 판단하는 지정재판부 하는 것이다.

-특수청은 의결사건에서 한계는 없나? 특검상설화로 의미 부여해도 되나.
▲(김동철) 특검은 검찰에서 많이 받았지만 특수청은 벽을 둔다. 검찰 권과 재판권을 잘못 행사하면 언제든지 고소, 고발이 들어오기 때문에 제대로 할 수밖에 없다.

▲(주성영) 합의사항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고검 수준의 특별수사청을 만드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양형위원회 위원장과 특별수사청 검사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재야에서 임명해서 실제로 검찰청을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박지경기자 jpkpark@kwangju.co.kr

대검 "중수부 폐지 등 수용 불가" 대법 "개혁논의 참여"

사법개혁 특위 합의안 반영...검찰은 환영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특별수사청 설치, 경찰의 수사개시권 명문화 등의 내용이 담긴 국회 사법제도개혁 특별위원회 합의사항이 10일 전격적으로 발표되자 검찰은 "결코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전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며 크게 반발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공론장에서 이뤄져야 하는 사법개혁 절차가 이해관계 주체들의 의견 개진 절차까지 생략된

채 진행된 것이 유감스럽다. 이번 합의안이 과연 국민을 위한 개혁안인지 우려한다"며 "합의안 전부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특히 "고위공직자와 정치권 비리, 대형 경제범죄 등 부정부패 수사를 담당하는 중앙수사부를 폐지하는 것은 부정부패의 파수꾼을 무장해제하는 것"이라며 "법 논리적으로도 부처의 직제를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전례가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9시 15분부터 긴급간담회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하고 입장을 정리했으며 "공론화되지 않은 내용을 일방적으로 입법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며 크게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고 한창식 대검 대변인이 전했다.

갑작스런 합의안 발표에 애초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던 법원은 "이번 합의안은 아직 논의 과정에 있는 것"이라며 "별도의 입장을 발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홍동기 대법원 공보관은 "그동안 법원은 사법제도 개혁에 관한 국회 논의 과정에 성실히 참여해 왔고 앞으로는 논의 과정에 좋은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사법제도를 이루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청은 법조개혁안에 김·경 수사관 조정 부분이 포함된 것과 관련 "사법개혁위는 선진 일류 국가에 걸맞은 수사시스템을 마련하는 과정에 있어 큰 전기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세계에서 가장 편안한 의자, 파트라

60여 개국에 수출하는 WORLD-CLASS CHAIR 파트라

파트라는 우리 디자인과 기술로 만든 제품을 세계에 공급하는 자랑스러운 한국브랜드입니다. 뉴욕에서도 밀라노에서도 나라는 달라도 가슴에는 모두 PATRA를 선택하게 알고 있습니다. 세계가 인정하는 의자, PATRA를 지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www.patrakorea.com

광주 대리점 (한보사무용가구) | (주)파트라 광주, 전남·북 총판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51-7 | TEL (062)225-5100 FAX (062)222-2490